

개방화에 대응한 한우산업 유통전략

충북대 농대 권 원 달

1. 수입개방과 한우사육

한우사육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아니라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90년말 현재 사육농가는 총62만호로서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총사육두수는 1,612천두로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되고 있다. 한우사육두수는 한우가격변동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85년이후 대체로 감소되고 있다.

한우사육규모를 보면 62만농가중 1~2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전체의 76.5%이고 기업규모인 50두이상은 전체의 0.1%에 불과하여 영세성을 지니고 있다. 한우사육은 역사가 오래되기때문에 우리나라대로의 사육기술이 발달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있다.

한우산업은 소값파동과 수입육증가로 계속되는 악순환을 거치고 있으며 농가의 사육의욕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라 한우사육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 못한채 무차별하게 수입육과 경쟁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우개량사업은 가축인공수정사업과 한우개량단지조성, 한우검정사업을 통해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한우사육과 쇠고기가격이 연계를 맺지못하였으며 한우사육을 위한 일관된 축산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기때문에 농가의 사육의욕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한우사육이 지니는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육류소비증가를 위한 축산물장기수급전망을 통해 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1인당 육류수요량을 현재의 18.5kg에서 2001년에는 31.9kg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에 쇠고기수요는 3.5kg에서 5.7kg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전망에 따라 소 사육두수는 90년의 2,088천두에서 2001년에는 2,946천두를 사육할계획이며 같은 기간에 한우는 1,576천두에서 2,308천두를 사육하여 1.5배의 사육두수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책면에서는 축산물가격안정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안정기준가격제도를 신설하고 축산물수급예측의 정확을 기하기위해 상하한가격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업농육성과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축자금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축산물유통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가축시장과 도축장시설개선과 도매시장의 증설 및 기능을 강화하고 육류등급제도의 실시와 축산물가공사업을 적극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한우의 적정가격 및 적정사육두수 확보를 위해 생우 수출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우수출을 쇠고기수출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2. 개방의 충격

우리나라 한우사육은 부업형의 영세성으로 전업화되지 못하기때문에 생산비가 높고 생산성이 낮은것이 특징이다. 사육형태도 노동력감소와 인건비 상승, 축산폐수등 사회문제로 여건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축산은 농가소득원의 주요부분이 되어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식생활의 서구화등으로 소비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축산물이 수입개방시 한우사육은 국제경쟁력이 어렵게 된다. 그것은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주요수출국의 수출가격(CIF)보다 3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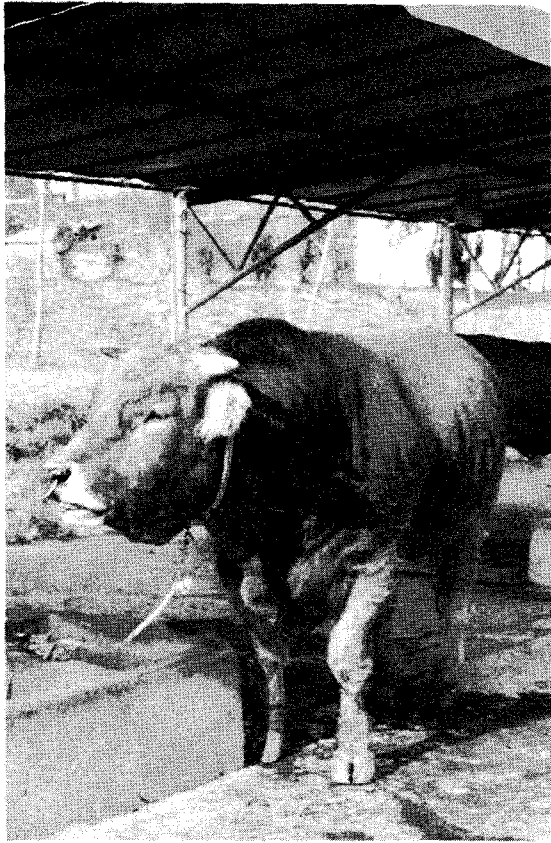
도가 되고 육질개선도 객관화되지 못하여 품질경쟁력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우의 출하체중은 450kg정도로 일본화우의 750kg에 비하면 지극히 낮다. 따라서 수입개방시에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이 모두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우산업은 침체하게 될것이다.

한우의 유통개선도 수없이 논의되고 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만족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소가격이 안정되지 못하여 농가사육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쇠고기가격제도도 가격자율화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나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다.

도축시설도 규모가 적고 가동율이 낮아 능률화되지 못하여 도축과정에서 물먹인 소등 부정육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육류등급제도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포장육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개방화될 경우 현행 유통체계하에서는 한우고기의 순수성과 유통과정상에 수입고기와 분리된 형태가 보증되기 어렵게 되어있다. 육류등급제가 실시되지 못하기때문에 등급설정에 대한 현실성있는 대안이 채택되는 것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계획중인 지육도체등급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설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더욱 필요하다.

개방화에 따라 수입쇠고기가 증가되면 필연적으로 현재보다 품질좋은 고급육수입이 증가될것이며 고급육은 한우육으로 둔감될 가능성도 높다. 수입육이 증가되면 수입육 소매시장점유율도 높아질것이고 따라서 수입육소매점포도 크게 증가되어 현재의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에까지 확대될것이며 그결과 수입육소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것이다. 수입육소비를 증가시킬 수있는 각종 시식회, 강습회, 품평회가 늘어날것이며 이로인한 한우고기 소비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내쇠고기간의 분리 유통체계도 문제될것이다. 현재 젓소뼈우나 젓소숫소고기의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한우고기로의 둔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축시장에서의 생축과 도체된 지육 그리고 소매과정에서 정육의 분리가 모호하기때문이다. 쇠고기 육질에 대한 소비자의 식별능력이 낮기때문에 모든 고기가 쇠고기로 통용되고 특히 젓소의 한우고기 둔감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로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여건들은 한우고기의 순수성과 유통과정에서 분리된 유통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것이며 결

과적으로 좋은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 유통개선의 중요성

한우고기의 우수성은 인정되고 있으며 수입육이 증가되면서 육질의 우수성은 더욱 인정되고 있다.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은 육질과 품위에 따른 적절한 가격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좋은고기와 좋지않은 고기의 가격차를 유지해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쇠고기유통은 정육소매가격이 자율화되지 않고 행정지도가격으로 묶여있었기때문에 육질에 따른 차별가격은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우가격과 지육가격이 자유시장거래 가격으로 결정되더라도 정육소매가격이 묶여있기때문에 가격형성이 연계성이 없었던 것이다.

행정지도가격으로 묶여진 가격수준으로는 지육경락가격으로 구입한 지육이 정육점의 수지를 맞추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육점은 질적마진을 통해 잡육도 상등육으로 판매하거나 젓소고기의 한우육 둔감, 수입고기를 한우육으로 판매하여 양적마진에서 질적마진을 높여서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행정당국에 의한 정육점규제는 정육소매가격으로 일관되었고 그 결과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있는 사육방법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좋은 한우를 사육해도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없게되었고 농가도 질좋은 소를 사육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인은 유통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공정거래를 지속하게되었고 유통개선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쇠고기의 지육율과 정육율과 가격수준으로서는 정육점의 수지를 보장

할 수 없으나 전국에서 정육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쇠고기가격이 자율화되더라도 부위별 등급별 차별가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등급간의 가격차는 생우가격에 반영되어 사육농가에 귀속되거나 소비자기호에 따른 지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채 상인이익만 유지되게 될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쇠고기가격자율화에 따른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이다. 즉 가격자율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위별 등급별 차등가격제가 철저히 실시되어야 하고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식별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상인의 불로소득만 높여주고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받을 수있다. 상인의 직업윤리는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농수산물은 상품적 특성때문에 상업윤리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 그러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상윤리가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있는 상관습과 제도적 모순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조사에 의하면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식별능력, 한우고기에 대한 부위별 등급별 식별능력이 지극히 부족하고 일부 백화점과 대형슈퍼의 정육점에서 채택되고 있는 부위별, 등급별기준은 상인의 편의를 기준하고 있지 생산자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육소매가격은 자율가격, 연동제, 자율가격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소매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실제 유통개선이란 측면은 강조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경제활동이 행정력으로만 규제될 수없었던 것이며 고기수급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악순환과정만 되풀이 되었다. 어떤 형태이든 정육소매가격자율화에 따른 가격기능을 통한 유통개선이 정착되어야 할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있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수입 개방하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필요한 고기수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것이며 한우육이 지니는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현재의 여건을 극복하여 장기적으로 경쟁체제를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4. 유통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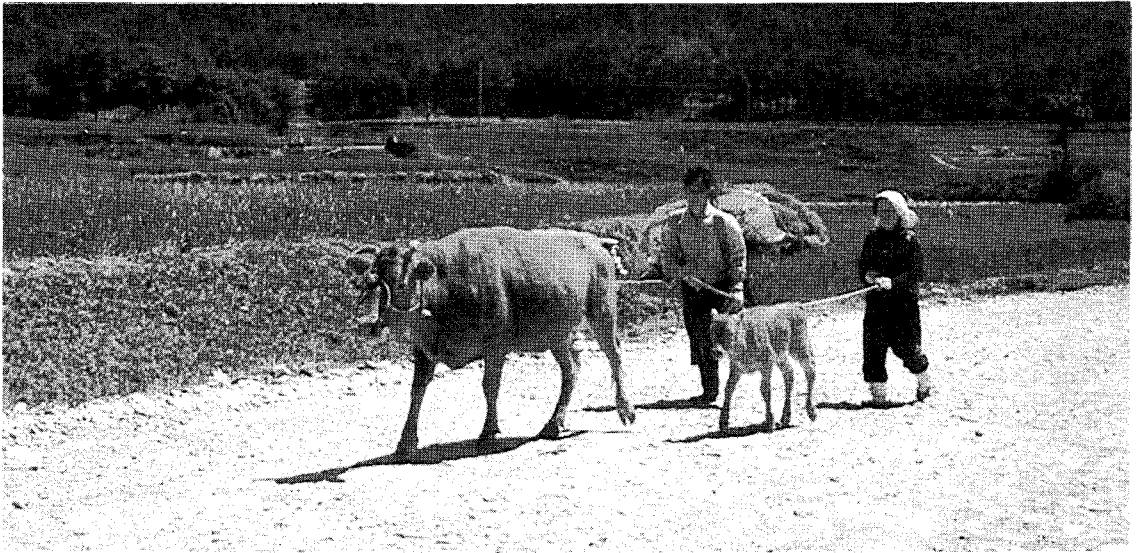
축산물유통개선을 위해 정부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축시장시설을 개선하고 운영방법도 생축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경매제도등 가축공정거래제도를 정착시키며 양축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했다.

축산물출하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계통출하를 위한 생축출하조절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육시장유통개선을 위해 도체등급제를 실시하며 도축장운영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축협외 공판장운영을 4개소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부분육가공공장 3개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유통개선을 위해 축산물종합판매장을 95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여 고급한우육판매를 전문화하고 종합육가공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계속 시책개발을 하고있으나 획기적인 시책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유통상의 모순때문이다. 금년부터 실시하려는 지육도체등급제도도 쇠고기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기준을 우리실정에 맞게 설정하는 일이며 육류등급사 자격제도도 실현성있는 운영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한우유통개선방법은 생축, 지육 그리고 정육의 등급제도가 연계되어 양질의 고기가 분류되어 생산 판매되어야 한다. 좋은 소는 좋은 쇠고기로 연계되어야 등급제도의 본래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지육도체등급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이기때문에 고기등급제도는 실시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축을 연계시키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부위별 등급별차등가격제 실시를 위해서는 쇠고기에 대한 등급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나 생산자가 인식할 수있게 하여야 할것이다. 쇠고기 가격자율화는 철저한 쇠고기등급제도의 실시가 선결과제이다.

축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는 쇠고기자율화에 따른 가격정책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쇠고기등급제를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식할 수있게 유통 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축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는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소비자가 속

지않고 좋은 한우고기를 살수있는 종합판매장 설치운영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좋은 고기를 구입할 수있게 선도적인 판매장을 확대설치하여 수입육의 한우육으로 둔갑을 방지하고 젓소고기의 분류유통체계가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우유통개선의 핵심은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육기술의 개발과 유통과정에서 한우육의 우수성을 분리하여 유통시키는 일이다. 정부나 생산자단체는 한우육의 유통개선을 위해 가격자율화에 적용한 등급제가 정착할 수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수입육이 증가되면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은 많을 것이기때문에 철저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조치와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한우사육기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한우육의 우수성도 인정되고 있기때문에 철저한 유통과정상의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할것이다.